

- ☐ 민주노조 사수
- ☐ 임금체계개악 저지
- ☐ 생존권 사수
- ☐ 전력산업공공성 강화
- ☐ 해고자 원직복직

무분별한 해외사업, 철저히 밝힌다!

발전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3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중간평가 및 청문회 등 향후 대응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전직 사장 등 핵심 책임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핵심 이슈에 대해 접근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했다. 산업부가 거짓된 통계를 내세우면서 이명박 VS 노무현 프레임을 형성해 국정조사를 사실상 방해했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청문회에 에너지공기업 3개 기관의 전임 기관장은 물론,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전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해 대질심문을 해야 한다. 수사권 및 계좌추적권이 없는 국정조사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청문회를 성과 있게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특검 실시를 포함한 후속 절차를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최현 정의당 기획국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정조사에서 자원외교의 몸통(MB, 이상득 전 국회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변 조수진 변호사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자원외교 주체들의 무능 부분은 많이 밝혀졌지만, 부패 부분은 많이 밝히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청문회와는 별개로 검찰에서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계좌를 압수수색 할 경우 왜 이렇게 부실한 자원외교를 펼쳤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MB정부 시절 발전5개사도 앞다투어 해외사업에 투자한 바가 있다. 발전노조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특히 동서발전의 자메이카 전력공사 부실투자에 대해서는 **8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이길구 전 사장을 고발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중이다. 특수부는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는 부서로 계좌추적 등이 전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3월 18일 오전 8시부터 경남기업과 석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원외교 부실·비리 수사에 돌입했다.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의(2015.3.13) 주요 결과

- 개별동의서의 위법성을 근거로 중부본부 장기근속격려금 청구 소송에 착수한다.
- 기본 시간외수당 일방적 삭감에 대한 진정(남동)과 소송(중부)에 착수한다.
- 4차 통상임금 청구소송은 5월초 접수한다.
- 제56차 중앙위원회는 2015.4.14(화) 14:00에 개최한다.
- 정기대의원대회는 2015.4.28(화) 14:00에 개최한다.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의 의미와 당위성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이라며 (노사정위원회에서) 3월까지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고, 정부는 노사정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4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정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사정위원회 대표들과 청와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3월까지 노사정위 합의도출과 4월 국회 노동시장개악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2016년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내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후속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정부는 정기국회 이전인 상반기 중 노동시장 구조개혁 및 연금개혁 등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국회 법안 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단체협약 가이드라인 △시행령 △업무지침 등을 통해 노동시장구조개혁이 현장에서 실제 집행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며 그 출발점인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상반기에 완료하려 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경우도 여야 합의 시점이 4월까지 완료되게 되어있어 제반의 박근혜 추진 정책이 4월에 집중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민주노총은 4월을 기점으로 선명한 정치적 요구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정치총파업을 선언하고 전개함으로써 정세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모든 노동자가 공멸한다는 판단에 따라 4월 선제적 총파업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4월 선제적 총파업 돌입을 시작으로, 6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범사회적 투쟁을 힘있게 촉발시키고, 하반기까지 총파업전선의 확대, 범국민총궐기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체의 힘과 사회적 힘을 추동하고 모아가는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등은 4월 단기 총파업을 통해 저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상반기 내내 투쟁의 파고를 유지, 확대해 나가기 위해 과거 96-97 총파업 당시와 같이, 우선돌입 가능 산별(사업장)을 시작으로 승기를 잡아 점차 확대한다는 전술이다.

민주노총은 4.24 선제적 총파업 돌입을 시작으로 각급 조직이 주요 현안에 대한 요구를 제시하며 연속적인 파상파업기조를 1년 내내 유지한다. 안타깝게도 발전노조는 현재 소수노조로서 교섭권과 쟁의권이 없어 직접적으로 총파업에 합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총파업을 통한 정세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모두가 공멸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며, 이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결집시켜 총파업을 지지하고 엄호할 계획이다.

행복해 지기를 두려워 할 것입니까? 내 권리를 지키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발전노조 깃발 아래 모인 우리들의 결의로, 민주노조의 단결된 힘으로, 모든 시련을 넘어 설 수 있습니다.